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 63억 들여 디지털 매력도시 구현

3대 전략, 9개 추진 과제 수립 행정 효율성↑·양질 서비스 제공 21개 시정 핵심사업 종합 컨설팅

서울시가 사회 현안 해결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을 추진, 시 핵심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3억 1900만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으로 디지털 매력도시 구현에 나선다.

시는 '선제적·종합적 분석 지원으로 과학 행정 가속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의 경제 가치 창출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토대 조성'이라는 3대 전략, 9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데이터 활용이 미흡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21개 시정 핵심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과제 발굴부터 활용, 정책 시행 전후 비교 분석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통해 시정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목표다.

민선 8기 시정 핵심사업 중 시급성·중요성·파급효과가 높은 21개 과제를 선정해 찾아가는 분석 컨설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대상 사업은 ▲상암 재창조 구상 종합계획 수립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 조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을 포함 총 21개다.

시는 상암 일대 교통 접근성을 분석하고 거점 이용 현황을 파악해 신교통 수단 등 경로를 설정, 저이용 시설을 활성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리버버스 이용객의 주요 동선과 이용 목적, 주변 상권 이용 패턴 변화를 도출해 정책 추진 효과성을 살피기로 했다. 리버버스 연

계 노선을 신설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강 주변 상권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권역별 도시철도 소외 지역 및 예상 교통 수요 파악으로 신규 노선과 신설역 위치를 제안할 방침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가 교통 효율성, 접근성 개선 등 도시 철도 네트워크 확장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지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조건을 비교하고 SNS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과 보상 기대 수준을 측정,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때 설득을 위한 소통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도 선보인다.

일상언어로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자사고' 이대부고, 일반고 전환 신청

학령인구 감소에 지위 포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하 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11번째 전환 사례가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대부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 구축,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 재정 부담 등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문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열한 번째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사례가 된다.

앞서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2013) ▲미림여고·우신고(2016) ▲대성고(2019) ▲경문고(2020) ▲동성고·송문고·한가람고(2022) ▲장훈고(2023)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학부모·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 시 두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환기' 복합교육과정에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2년간 총 25억(교육부 15억, 교육청 10억)을 지원받아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존치가 결정됐음에도 일반고 전환을 통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학교 선택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평적이고 다양한 고교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광명시, 국도비 150억 확보... '역대 최대'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서 선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 계획

광명시는 2024년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국비 116억 9천만원, 도비 33억 1천만원 등 총 150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0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과 비교해 49억 원(48.5%) 증가한 수치다. 선정 건수도 6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1건 대비 1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국·도비를 확보한 공모사업 중 5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8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8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12억 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지원사업(7억 원) 등이다. 모두 시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광명시가 선정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로 시는 3년간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을 투자해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불투명한 세수 여건으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사 90% "정부 대책에도 교권 변화 없어"

故서이초 교사 1주기 여론조사 교사 98.7% "수사 결과 신뢰 안 해"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상황 경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서울 교사 10명 중 9명 가량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교권 관련 대책에도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교사노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과 교사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변화에 대해 77.4%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4.3%)나 '좀 더 나빠졌다'(6.9%) 등 오히려 나빠졌다 응답도 11.2%에 달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는 담임 교사가 교육활동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 일각에서는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 폭언 등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정황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 83.6%와 교사 98.7%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범죄혐의없음'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쥐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우려했다.

서울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78.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자주 경험했다'는 답변도 16.0%에 달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의미가.

박 위원장은 "서울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의 관계"라며 "교사들의 56.2%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응답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교사 직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7월 9일 (화)
음력: 6월 4일

수도권 날씨
23~2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9 | 해짐 / 19: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깜짝' 1위...1차 1위 RN은 3위로
▲일 자위대, 필리핀 파병 가능해진다...남중국해 中 포위 강화 /사진 뉴스스

▲전쟁 9개월에 지친 이스라엘인들... "휴전·총선하라" 반정부 시위
▲"관광객 꺼져" 식당서 물벼락... '관광 반대' 시위에 물총 꺼낸 바르셀로나



▲美민주당 의원 다수, 차기 후보로 해리스 지목 /사진 뉴스스
▲중국어 두 번째로 큰 담수호 붕괴... 6000여명 대피